

# 장수시대의 도래와 인생의 이모작 설계



김성훈 총장  
상지대학교, 전 농림부 장관

## 1. 역발상(逆發想)의 해법

인생을 살다보면 전혀 자기 잘못이 아닌 일로 위기와 난관에 부딪칠 때가 있다. 자기 판단과 자기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생긴 낭패는 참아 낼 수 있어도 전혀 자기와는 상관없는 이유로 파탄에 직면할 때는 견뎌내기 힘들다. 엉뚱하게도 정부정책의 실패로 비탄(飛彈)과 유탄(流彈)에 희생양이 될 때는 더욱 억울하다.

### 가. 마음대로 안되는게 인생의 묘미

이러할 때 사람들은 흔히 신세를 한탄하면서 조상탓 남탓으로 돌리려 한다. 심지어 자기는 재수가 없어 하는 일마다 망친다고 자학하고 자조를 한다. 비관적인 인생관이 그래서 생긴다. 그러나 만약 인생이 자기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면 행복할 것인가. 세상은 밝아지고 평화스러워질 것인가. 아니다. 한 평생을 제 뜻대로 잘 살 수 있게 된다면 도리어 그 인생은 도리어 재미가 없고 밋밋한 삶이다. 그래서 인생은 뜻대로 꼭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사는 재미가 있고 묘미가 있

는 것이다. 제 뜻대로만 이뤄지지 않은 인생의 묘미, 바로 이 대목에 인생살이의 해법(解法)이 있다. 생각을 바꾸어 문제를 다시 풀어보자는 뜻도 여기에 있다.

### 나. 세방화 : 김치와 우리 식품, 우리기술을 세계무대로

지금 우리나라 농민들은 그 놈의 세계화(globalization) 개방화 때문에 망할 지경이다. 농약, 방사선 조사, 유전자 변형의 외국 농산물과 각종 유해요소 덩어리인 외국 식품들이 혈값으로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도무지 무슨 농사든 해볼 수가 없다. 천여년 지어오던 배추농사(김치농사) 마저 문을 닫을 지경이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가장 지역적이고 가장 토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바꿔 생각을 해 보면 세계화와 지방화(localization)를 합쳐 세방화(glocalization)하는 역발상이 가능하다. 예컨대, 농림부와 농협이 도와 예전의 우리 조상들이 담귀 먹던 방식을 본 따 정부지원하에 100% 친환경 유기농김치를 생산케 하여 이를 적극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한다면 외국산과 확연히 차별화 될 것이고 국내 소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해외로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 수가 있다. 어디 김치뿐인가. 세방화(世方化)가 가능한 분야는 수다하다. 대기업 재벌들이 재미보고 있는 각종 농식품 가공사업과 다양한 주류(술) 및 음료사업을 농민들이 일정 규정 안에서 자유자재로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행정 및 지원제도를 고쳐 장려한다면 농가소득은 쉽게 배가할 수 있다.

#### 다. 발상을 살짝 바꾸면 해법이 보여

그런데 우루과이 라운드와 WTO 그리고 정부 시책의 실패가 주원인이 되어 전국 농가에 막대한 부채가 쌓인 현상을 두고 박정희 군사정권 초기의 '농어촌 고리채 정리조치'와 같은 농가부채 탕감정책을 주장하면 정부 일각과 언론사회가 욕을 해댄다. 그것도 영어를 써서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현상)'라고 규탄한다. 그런데 160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 비리기업주들을 살려 놓고 돈을 더 찍어내어 쓰러질 은행을 일으켜 세워 놓고서 는 짐짓 '화의조정' 또는 '부채소각'이라고 아름답게 부르고 있다. 부채탕감이나 소각이 따지고 보면 같은 뜻, 같은 내용인데도 다른 것처럼 미화하고 있다. 농가부채 탕감조치나 기업과 은행의 부채 화의조정(워크아웃)이나 같은 말인데도 들이대는 잣대가 다르다. 생각을 바로 해 바른대로 말하자면 농가부채야말로 정부 탓, 국가 탓, 하늘 탓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농가부채를 화의조정해주고 정 안되겠다 싶으면 소각(탕감)시켜 주어야 한다. IMF 때는 언론 권력을 틀어쥔 기득권 주류세력들이 농가부채 탕감이라는 말만

나와도 이를 무슨 '모럴 해저드'라는 말로 주눅을 주었기 때문에 역발상적인 농가부채 화의조정을 실현할 수 없었더라도, 지금은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에 농민 이장 출신의 장관 그리고 386 운동권들이 정권을 잡도록 농민 노동자들이 뽑아놨지 않은가?

인생도, 농정도 그리고 더 넓은 의미의 국정과 세계화도 발상을 바꿔 해법을 찾으면 현 단계 농업, 농민, 농촌 문제 중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다. 문제는 권력을 쥔 이들과 당사자 농민들의 결심여하이며 발상의 전환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농업 농촌 농민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농업을 국민건강 증진과 환경생태계 보전차원에서 접근하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요 국가 사활의 문제로 승화된다. 농촌 문제 역시 농민만의 생활 터전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우리 모든 국민과 후손들의 삶의 터전으로 떠오른다. 농민문제는 21세기 유일한 생명산업의 보존 계승자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상공업에 대한 농업, 도시 지역에 대한 농산어촌, 상공인에 대한 농어민이라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물질과 환경생태계의 순환체제로 돌아 아니라 하나인 통합·순환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 2. 장수(長壽)시대의 개막

WHO(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77세(남자는 73세, 여자는 80시)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수준을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한국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3년 동안 1.5세나 증가)얼마 안있

으면 선진국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추세이다. 정부도 이 같은 추세라면 2020년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남79세, 여86세)에 이러 세계 제2의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고령화현상은 저출산현상과 맞물려 농촌지역에 더욱 두드러진다.

### 가. ‘노인천국’ 농촌은 곧 ‘장수시대’

그런데 현재 사회일각에서는 농촌이 급격한 고령화 현상에 시달려 앞으로 10여년 후면 초고령사회가 되어 곧 끝장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진단들이 널리 퍼지고 있다. 그러나 생각의 각도를 조금만 바꾸어 다시 생각해보면 고령사회가 어디 대한민국 농촌뿐인가. 의학기술의 발달과 식품영양 및 위생 수준 향상으로 세계 도처에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 고령사회는 시쳇말로 세계도처의 “유비쿼터스(Ubiquitous, 어디에나 있는)” 현상이다.

그중에서도 농촌 고령화는 부정적인 모습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서양사람들은 노령인구 투성이의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알프스 산악지역 농촌을 가리켜 세계적 장수지역 또는 장수촌이라고 부르며 다투어 농산보전을 지원하고 여가를 농산어촌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농촌, 어느 곳을 가보아도 장수촌이 아닌 곳이 없다. 그런데도 명색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우리 농촌 고령화 현상을 보고 비관적인 진단만 내린다. 마치 ‘미래가 없는 못 살 곳’ 처럼 말들을 한다. 어느 정부기관이 ‘우리 농촌은 고령화사회가 아니라 장수지역이다’라며 어메니티를 자산화하는 처방과 함께 농촌진흥의 깃발을 올리는가 싶더니 어디서부

터 ‘본연의 일이나 하라’는 핀잔을 받고 쑥 움츠러든 적이 있다. **초고령사회를 장수사회라고 접근하는 역발상의 해법이 바로 오늘날의 농산어촌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고령화(高齡化)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전환이다. 고령화가 나쁜 것이 아니라 고령화에 대한 인식과 처방이 제대로 안된 것이 잘못됐다. 예부터 인간은 불로장생(不老長生)을 꿈꾸어 왔다. 이천여 년전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장생초를 찾기 위해 수천의 동남동녀(童男童女)를 실은 배를 한반도로 보냈다는 전설이 지금도 널리 회자(膾炙)되고 있다. “고령화=장수사회”는 도리어 축복받아야 할 사항이다. 장수가 축복이 되게 하려면 당사자는 물론 사회전체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높이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차원의 정책과 산업·노동차원의 정책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복지정책은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한편, 노인존중의 사회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산업·노동정책으로는 ① 일본의 미쓰비시, 히타치, 후지, 미국의 Days Inn 등과 같은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과 재활용의 기회확대 ②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과 급여체계 개정 ③ 고령층 위주의 Silver Business 창업지원 ④ 사회투자개념으로 연금제도의 개편 ⑤ 고령자 자원봉사체제 및 기회확대 ⑥ 학교교육에서부터 고령사회=장수시대에 대비한 교육강화 ⑦ 특히 농촌의 고령층과 도시의 은퇴자와의 만남을 통한 농어촌에 Silver 산업 창업을 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틀볼같이 타오르는 도농 상생운동

3차 5개년 계획(1972-76)이 끝나면 “그늘진 응달과 농어촌”에도 따뜻한 별이 들게 하겠노라고 약속했던 고 박정희 대통령은 작고하기 직전 당시 경제기획원 고위관료들이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쌀과 농산물 수입개방을 주장하자 크게 노했다. 경제개발과정에서 뼈 빠지게 희생하며 내조한 조강지처(糟糠之妻)를 좀 살게 됐다고 헌신짝처럼 내팽겨 치면 누가 농촌에 남아 식량주권과 지역사회를 지킬 것인가라는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 가. 수도권 과밀은 농정 실패 탓

서울 등 대도시는 지난 30여년 사이 이농민들의 급격한 난입으로 일찍이 초만원 사례를 거듭하고 있다. 주택난, 상하수도난, 교통난, 환경오염에 도시 범죄마저 무척 심해졌다. 농민들을 농촌에 그대로 살게 하면서 정책지원을 계속하는 것 보다 이농에 따른 추가적인 도시 투자비용이 17배나 더 든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이 나왔고 위헌 판결을 맞보았다. 이 같은 수도권과 대도시의 과밀현상은 본질적으로는 농어촌 정책의 실패에 따른 결과물인데도 그에 대한 인식이 박약하다. 농업문제가 무대와 주제를 바꿔 도시문제로 둔갑한 것일 뿐이다. 이제는 농어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왕의 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웰빙을 위해서라도 농어민들로 하여금 농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농촌 어디를 가보아도 삶의 질과 조건이 도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나라를 두고 말한다. 반면, OECD 선진국 회원국인 우리나라의 도농(都農) 격차는 국민소득 1,000달러 수준의 후진국과 다를 바 없다. 누가 시장경제가 좋고 자유무역주의가 좋은 줄 모르는가. 정책의 시행결과 재미 보는 사람, 혜택 보는 산업이 따로 있고, 피해보고 고통 받는 사람(산업)이 따로 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고 중국적으로 이런 사회는 지속성(sustainability)을 잃게 된다.

#### 나. 균형추 잃어버린 비교우위론

지난 40년간 고속경제 성장과정에서 고전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서 특히 도시와 농촌, 상공업과 농어업이 각기 승자와 패자의 반대방향의 길로 나뉘어 서로 외면하며 걸어 왔지 않은가.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농촌 농업 살리기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행해지고 있다.

일찍부터 J.R. Hicks의 ‘보상의 원칙(The Compensation Principle)’에 따른 농어촌 균형발전 지원제도가 정착되었고 J. 롤스의 ‘최약자 보호’ 원칙에 따른 농어민 보호정책이 작동해 온 것이다.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 보다 우월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상생의 정책들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위정자와 경제단체와 경제학자 중에 시장경제가 좋다는 말만 할 줄 알지 어떻게 농어촌 농어민을 지원하는 것이 진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실천에는 외면하는, 본말이 전도된 이론가들 투성이다. 균형추를 잃어버린 비교우위론, 삶의 질을 망각한 국제경쟁력 우선론 등 일방적인 자유주의 주장 일변도뿐이다.

#### 다. 응달진 농어촌에 따스한 별을

도시와 농촌, 상공인과 농업인이 서로 재미 보며 함께 고루 잘 살자는 공생공영(共榮)의 상생운동이 바로 이 같은 철학에 근거해야 한다. 오늘날 도시민이 추구하는 웰빙(Well Being)에 농촌만이 갖고 있는 특유한 어메니티스(amenities: 쾌적함)를 결합할 때 일과성(一過性)이 아니라 영속성이 보장되는 도농 상생운동이 가능하다.

그 예지가 바야흐로 문화일보와 전경련, 농협 등의 참여하에 요원(療原)의 불길처럼 퍼져 나가고 있다. 경제성장의 응달진 그늘에서 정부로부터 소외되고 경시돼온 농업, 농촌, 농민들에게 따스한 별을 들게 한 1사1촌 운동은 그래서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 마땅하다.

#### 4. 이제 농업은 '어메니티 산업' 이다.

소 한 마리가 5,000여평의 초원에서 한가하게 풀을 뜯어 먹고 자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콜린 크라크가 농업을 일컬어 1차 산업이라고 정의를 내린지 벌써 한 세기가 되어가고 있다. 제조업은 2차 산업, 유통·서비스업은 3차 산업이라고 분류했다. 그 무렵 윌리엄 페티라는 영국 출신의 경제학자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공산품과 용역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 수익 규모와 종사자 수가 1차 산업 보다는 2차 산업 그리고 마침내는 3차 산업으로 몰린다는 '페티의 법칙'을 발표하였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1인당 식품수요가 비례하여 늘지 않거나 품목에 따라선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더라도 총소비량은 그리 크게 늘지 않는 현상을 보고, 그래서 농업은 상대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테오도르 슈츠

교수의 상대적 농업쇠퇴론이 공식화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광활한 면적의 신대륙 국가 초대형 농업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다국적기업들과 손을 잡고 더욱 대량생산 모노칼처(mono culture, 單作) 체제를 강화하고 공격적이 되었다. 인구가 많고 생산비가 높은 아시아, 유럽 대륙 시장을 겨냥하여 세계 소규모 가족농업체제 정복계획을 세운다. 농산물 수출국 정부와의 합동작전이 이른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었으며, 세계 무역기구 DDA 협상의 탄생이었다. 쌀 재협상도 그 계획의 일환이었다. 막상 지구상의 소규모 가족농이 멸망할 경우 그렇다고 이들 초국경 대형기업들이 전체인구를 먹여 살릴 만큼 충분한 생산여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데 인류의 비극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 세기 세계 식량파동에서 보았듯이 가격만 몇 배로 뛰고 돈을 주고도 제대로 사먹지 못할 만큼 전체 식량 수급균형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

#### 가. 강대국-다국적기업 손잡고 전 세계 '가족농' 정복 나서

그런데도 앵무새 같은 경제학자들과 관료, 언론, 정치지도자들은 장차 후손들, 아니 당대의 자기들이 당할 재앙을 똑바로 살피지 못한 채 염불 외듯 농업의 시장경제 만능론과 개방화의 대세론만 되풀이한다. 세계화(globalization)가 무엇을 노린지도 모른 채 세계화를 부르짖는다. 제대로 생각할 줄 아는 지도자라면 앞서 소개한 크라크나 페티 그리고 슈츠의 주술로부터 깨어나 진짜 시장경제의 진수를 개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들 말대로라면 우리나라와 같이 비좁고 값비싼

땅에서 많은 사람이 매달려 살며 영위하고 있는 숙명적인 소규모 가족농업은 문을 닫고 사라져야 한다. 1.4ha의 쌀 농가를 6ha로 키워봤자 오십보 백보나 다를없다. 명색이 학자요 목민관이라면 오히려 가족농업 공동체 경제를 복돋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그것도 시장경제 원리에서 찾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농업의 3차 산업화이다.

전통적인 1차 산업인 가족농업을 전통과 문화·생태와 감성이 가미된 새로운 형태와 영역의 온고이지신의 새 농업으로 개척해내야 한다. 새 수요를 창조하는 가족농 중심의 가공산업을 일으켜 1.5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마케팅 서비스를 강화하여 2.5차 산업으로 승급시키며 문화와 생태와 사람의 따뜻한 정을 포괄하는 3.5차 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농업은 이제 “3차 산업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지식산업이 바로 새로운 형태의 제4차 산업이기 때문이다. 전통문화와 역사, 환경과 생태, 풍경과 인정(감성)이 한데 섞인 새로운 개념의 생태농업과 그 가공·유통·어메니티(amenities)산업이야말로 우리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올인시키는 신농업, 신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창조되는 유형무형의 자산과 생산물에 기반을 둔 친환경 지연(地緣)산업과 전통산업의 활성화가 어메니티 산업의 골격이 될 수 있다. 전통문화와 예술, 역사유물과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자원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일찍이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바야흐로 세계는 로스토후 교수의 ‘고도 대중 대량소비’ 단계를 뛰어 넘어 점점 다양한 개성적인 소비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예고

한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 말은 **다품종 소량생산 및 소비체제가 주류를 이루는 시대로 바뀌고 있음**을 뜻한다. 무조건 큰 것이 좋은 규모의 경제성(economy of scale)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다양한 문화와 기호에 바탕을 둔 범위의 경제성(economy of scope)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단일품목의 대량 생산체제가 다품목 소량 공급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크고 싼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전통적인 것이 좋은 시대로 바뀌고 있다.

#### 나. 전통·문화·생태·포괄 ‘신 농업’으로 탈바꿈해야

우리나라와 같이 오랜 역사와 높은 예술적 향기, 깊은 전통의 멋과 인정미 넘치는 농촌문화, 거기에 고도의 완전발효식품 문화, 다양한 슬로푸드(slow food) 조리법, 누가 뭐라해도 오밀조밀 다정한 시골 고향의 풍경, 이 모두가 우리 농업을 제3차, 4차 새로운 경지로 승화시킬 귀중한 소재들이다. 특히 맛과 향기와 색깔과 모양, 저장성과 가소화율(可消化率)이 뛰어난 식품 발효기술, 거기에 안전성을 보장하는 우리 고유의 친환경적 친인간적인 식문화(食文化)는 세계화 시대 고품질 지연상품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농업 희망찾기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면 이를 실천할 기술적인 여러 정책수단 개발은 농민 당사자와 정부의 결심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개척이 가능하다. 남의 나라, 남의 이론 따라하기식 앵무새 같은 시장경제·무역자유화 정책 패러다임을 순수 우리 것의 세계화, 즉 세방화(globalization)로 확 바뀌야 할 때이다. 필요하다면 사람들도 확 바뀌어야 한다. 이는 전환기 우리 농업인들의 작은 소망이다.

## 5. 結論 : 인생은 2모작, 3모작도 가능하다.

1994년 12월 우리나라 농업·농촌 운동사에 있어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그동안 농·산·어촌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에 시름하거나, 농촌살이의 미래에 대해 장님 코끼리 식 진단만을 해대던 각 분야의 학자, 연구자, 농업인, 농촌기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농·산·어촌 어메니티(Amenities)연구회(회장 : 이내수)」를 발족시켰다. 산업화 시대의 개발후유증으로 각종 몸살을 앓고 있는 도시와 농촌, 도시민과 농업인이 다함께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공유한 자리였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크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농업대책은

첫째, 대부분이 그 핵심대상으로서 사람을 놓치고 물질과 효율성만 추구하다보니 정책 따로, 사람 따로의 괴리현상이 심화돼 왔다. 신자유주의 신고전학과 경제학 이론 자체가 피(血)도 있고 살(肉)도 있고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있는 살아 움직이는 보통사람들을 배제해 왔다. 단지 가격수급변화에 대해 합리적으로 반응하는 가상의 경제인(homo economicus)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경쟁과 효율성만 중시하여 인간소의 현상을 불러 들였다. 다시 말하여 **클수록 좋고 큰 놈만이 살아남는 규모의 유리성(economy of scale)이 정책결정의 가장 중요한 변수이었다.** 작은 놈, 더딘 것은 **탈락되어야 하는 것이 마치 합리적인 경제법칙인양 모두들 착각하게 만들었다.**

### 가. '소규모 가족농' 소외 농정 문제

둘째, 엄연히 농촌현장은 농업문제, 농촌문제, 농민문제가 하나의 살덩어리(cluster)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정부는 부처 분할주의와 부처 이기

주의, 심지어 한 부처 내에서도 국, 과 별로 따로 따로 행정이 집행되는 바람에 하나의 문제가 여러 개의 행정집행 대상으로 쪼개지고 분할되어 모두가 “장님의 부분적 진단과 처방”만 난무하였다. 그 결과 행정에너지와 예산 및 인력의 낭비는 천문학적이고 현장의 농업인은 간지럽고 감칠맛만 보다가 헛물을 쫓기 일쑤였다.

셋째는, 사람, 땅, 자본, 지식 중에 규모가 작거나 이용도가 낮은 이른바 한계자원(marginal resources)은 재생·재활용이 불가능한 양 버려지고 내팽개 쳤다. 1.4ha나, 6ha나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인데도 전자는 탈락시키고 후자만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과 자기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인간을 놓치고 효율(경쟁) 위주의 사고방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앨빈 토플러가 말한 다품종 소량생산 및 개성적인 소비 시대에 걸 맞는 다양한 “범위의 경제학(economy of scope)” 기본 개념을 배워보지 못한 무위무능 때문이다.** 대규모 기업농이 판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80~85% 농민은 소규모 가족농(family farm)이라는 사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학자와 관료들이 너무 많은 권력을 행사해 온 것이 문제이다.

### 나. 도시의 웰빙수요, 농민이 말도록

마지막으로 도시의 웰빙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과 이유가 농·산·어촌에 풍부한 어메니티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한데 기인한 것임을 모르고 있다. 농어촌에 고유한 역사, 문화, 지리, 생태환경, 유기농산물, 풍경, 어린이 산 교육장 등 이른바 어메니티(농촌다움, 산촌다움, 어촌다움)가 그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며 해법이다. 그 무궁한 가치와 자원을 개발논리에 묻혀 놓아 버렸었다. 이

제 장수화시대 제2인생을 설계함에 있어 고령농민들은 어메니티의 자원화에 눈을 돌려야 한다.

천만다행으로 최근 농촌진흥청이 이를 이슈화했고 농업기반공사는 아예 주력사업으로 농·산촌 어메니티를 자원화 하겠다고 나섰으며, 농협은 이미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을 끌어들여 1사1촌 운동으로 이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막상 정부 주무부처와 기획당국 그리고 최고 통치부는 아직 기별이 없다. 그 많은 언론 중에서는 문화일보와 경향신문만이 농·산·어촌 어메니티의 중요성에 선각자처럼 길을 밝히고 있다. 모처럼 도시의 웰빙수요와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자원이 맞장을 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아 도시민이 돈을 쓰며 찾아 올 수 있는 찬스를 놓칠까 두렵다. 지난 20여년간 친환경 유기농업이 환경생태계 어메니티를 살리고, 동시에 소규모 가족농, 특히 땅이 좁고 땅값(생산비)이 높은 WTO 개방체제하의 우리 농민이 살 길인데도 외면했던 경험과 유사하다.

#### 다. 고령화 농촌에 '제 2의 인생을'

그 단적인 사례가 농산어촌의 고령화를 비판하는 행정과 여론의 잘못 진단된 처방들이다. 어찌 우리 농업, 농촌에만 고령화란 말이다. 일본은 우리 보다 근 두 배나 더 심각한 초고령화 현상을 빚고 있고 서구 어느 나라 농업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오히려 고령화 문제를 긍정적 적극적인 장수화의 방향으로 받아들여 고령농민을 자원화하는 처방이 실행되고 있다. 인생은 일모작만이 아니다. 二毛作, 三毛作도 가능하다. 그 작업의 방법과 대상을 달리해 주고 농업을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승화 발전시키면 도시와 농촌 모든 노인들에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

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를 돈이 생기는 새로운 Silver 비즈니스로 만들어 낼 수 있다. 농업이란 원래 1차 산업만이 아니라 1.5차, 2.5차 산업이었음은 일찍이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 주고 실천해 오던 삶이었다. 고령화 농촌, 농업, 농민에게 제2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적극적, 긍정적 정책 대안을 마련할 때이다. 인생은 二毛作 때부터 더욱 그 가치가 빛난다. 우리 이제 모두 2모작 인생을 설계해보자!

〈지난 4월 13일 aT센터에서 본 협회와 농진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가 개최한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Ⅱ) 심포지엄 발표문에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하는 김성훈 총장



심포지엄참석자 광경